

“나 죽으면 부산에 묻어주오”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캠벨 에이시아(16)양은 자칭 외국인으로 오해할 법한 이름과 외모지만 부산 용호동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다. 아빠가 캐나다인, 엄마가 한국인이라 영어와 한국어 모두 유창하다. 초면이라던 완벽한 한국어에 놀라고, 해박한 6·25전쟁 지식에 다시 놀란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국·벨기에·네덜란드 등 파병국을 찾아 잠전 노병들과 교류한 사연이 매스컴을 여러 번 탔다. ‘잠전 용사들의 손녀’ ‘청소년 외교관’이라는 자기소개가 과장이 아니다.

에이시아의 주 활동 무대는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이다. 용호동 집에서 지적이라 어릴 때부터 단골 산책 코스였다. 매년 6·25나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영연방 현충일(11월 11일), 성탄절 등 의미 있는 날 군복 차림으로 방문객을 맞이해 동네 명물이 됐다. 지난 4월엔 부산의 ‘2030 엑스포’ 유치 역량을 가능하게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안내도 맡았다.

그날 실사단은 공원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에이시아의 안내로 분수대를 뱅풍처럼 둘러싼 커다란 비석들을 지날 때 일부 위원

이 발걸음을 멈췄다. 전사자와 실종자 4만896명의 이름을 빼곡히 적은 추모 명비 앞이었다. 마침 위원 8명 중 4명이 6·25 참전군 출신이었다. 질문이 이어졌다. “우리 용사들 이름은 어디 있나요?” 유엔기념공원이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라는 설명을 비로소 실감한 표정들이었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자유 진영 22국 청년 195만7733명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다. 3만7902명이 목숨을 잃었다. 1951년 유엔사가 전국 각지에 기념탑을 세웠던 유해를 한곳에 모아 조성한 공동묘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2300 용사는 ‘한국 수호신’
자주 찾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

지가 유엔기념공원의 기원이다. 정전 후 미국 등 7국이 유해를 본국에 가져가면 서 현재는 11국 장병 2320명이 잠들어 있다. 처음엔 유엔이 직접 관리하다가 1974년부터는 11국 주한 대사들이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관리하고 있다. 유엔 산하기구 격인 외교 시설이다.

이런 역사를 가졌지만 오랜 기간 거의 조명받지 못했다. 1·2차 세계대전과 달리 6·25전쟁이 국제사회에서 ‘잊힌 전쟁’ 취급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 생존한 유엔군 장병들의 여생도 굴곡이 많았다. 상당수가 10대 후반에 전선에 투입됐다. 예민한 시기에 겪은 끔찍

한 전쟁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다. 폐허가 된 나라에 희망을 갖기도 어려웠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세월이 수십 년 흘렀다.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 건 2010년 무렵이다. “죽으면 부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참전 용사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6·25 60주년을 맞아 본격화한 보훈처의 초정 사업으로 한국을 다녀간 뒤 생긴 일이다. 한국의 발전상을 보며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던 참전의 정당성을 찾고, 마지막 날 부산에 잠든 전우들과 교감하며 정서적 위로를 받은 것이다. 2015년 5월 프랑스 참전 용사 레몽 베르나르씨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9명이 사후(死後) 안장됐다. 60여 년 만에 실질적인 묘지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다. 공원을 공동 관리하는 11국 대사들도 바빠졌다.

사후 안장을 희망하는 노병들은 “죽어서도 한국을 지키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70년 전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여전히 정전 상태이고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진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대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립 서비스가 아니다. 공원을 공동 관리하는 11국은 이곳을 사실상 자국 국립묘지로 간주한다. 북한 미사일이 부산에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들이 가만있겠나. 이번 주 일요일이면 6·25 발발 73년이 된다. 이보다 유엔기념공원을 찾지 적합한 날이 많지 않다. 운이 좋으면 에이시아의 안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143]

영광 송어젓

송어젓 한 마리만 밥 한 그릇으로는 부족하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송어젓을 꺼내 양념에 무쳐 내놓으면 다른 반찬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고춧가루다. 물기가 없이 꼬들꼬들 숙성된 송어젓은 배어 먹기도 좋다. 음식을 조리할 때 필요한 젓국을 만드는 조미용이 아니라 자체로 완성도가 높은 훌륭한 찬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장모님은 새우젓 다음으로 즐겼다. 그 입맛 때문인지 아내도 입맛이 없을 때 송어젓을 찾는다. 아무리 입맛이 떨어져도 송어젓 한 마리만 단번에 입맛을 되찾아 준다.

송어의 본래 이름은 ‘반지’다. 영광, 신안, 목포, 진도에서 송어 혹은 송어라 부른다. 강화도에서는 밴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멸치잡이 그물이나 안강

망에 들기에 때로는 잡어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밴댕이회가 알려지면서 붐부터 초여름까지 귀한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반지와 밴댕이는 엄연히 다른 생선이다. 같은 청어목이지만 반지는 멸치과에, 밴댕이는 정어과에 속한다. 밴댕이는 아래턱이 길고 반지는 위턱이 약간 길다. 또 반지는 가슴지느러미의 맨 윗줄기가 수염처럼 길다.

품질 좋은 송어를 살 수 있는 곳으로 강화도 선수포, 김포 대명포구, 영광 설도항, 신안 송도어시장 등이 있다. ‘자신어보’에서는 ‘해도어(海鮫魚) 속명 소어(蘇魚) 또는 반당어(伴當魚)’라 했다. 그리고 ‘흑산 바다에서 가끔 볼 수 있고, 암태도에서는 망종 때 잡힌다’고 했다. 망종은 음력 5월, 양력 6월 초중 된다. 망종은 24절기 중에서 아홉



째 절기로 보리 베기에 이어 모내기하기 좋은 때다. 이 무렵이 되어야 비로소 보릿고개를 면할 수 있다.

농사와 고기잡이를 같이 해야 하는 바쁜 철에 갯마을 어머니들에게 찬을 마련하는 것은 이중고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냉장고나 보관 시설이 좋지 않은 시절이라 여름철에 미리 반찬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젓갈이다. 젓갈 자체가 훌륭한 찬이 되는 것으로 으뜸은 송어젓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지금은 귀하지만 당시에는 잡어처럼 흔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社 說

‘구시대의 유물’ 돼 가는 한국 대학들, 남은 시간 많지 않다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Global+Local) 대학 심사 결과 15곳(19대학)이 예비 선정됐다. 이 대학들의 특징은 학문·학과 간 칸막이, 대학과 대학 간 벽, 대학과 지역 산업계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개혁안을 낸 것이다. 부산대·부산고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4곳은 두 대학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했다. 포항공대·울산대 등은 지역사회·산업계 연계, 한동대·순천향대 등은 과감한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를 제시했다.

지금 우리 대학들 상당수가 치열한 연구와 수업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교수들의 편하고 안정된 직장이 돼 있다. 세상이 인공지능(AI)과 ‘챗GPT’ 시대로 무섭게 변하는데 교수들은 낡은 교과목을 붙들고 저항하는 대학이 한둘이 아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이 매년 수천 명씩 자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T 분야, 배터리·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낡은 과목을 철방뚱으로 붙들고 있는 교수들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학은 사회에 짐이 될 뿐이다. 대학 전체 정원 내에서도 학문별 정원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과 구분 시

‘킬러 문항 폐지’ 공약했던 李, 정부가 발표하자 “최악 참사”

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20일 “킬러 문항을 없앴다고 사교 유행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기존 수능 기조 유지도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능을 개편하고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문제의식, 해법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참사라고 한다면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나. 이들은 이런 일이 밝혀져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이 대표는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한 국회를 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뒤에 숨었다.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구속을 피하고 나자 다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다.

대는 끝난 지 오래다. 학과는 교수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학생에게는 필요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도 대학 서열화 해소 등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 대학들이 과감하게 문호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대가 지방 국립대와 강의를 공유해 일정 학점 이상을 따낸 학생들에게 부전공 인정 등으로 개방하면 ‘교육 지옥’을 해소하는 전기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저출생 여파로 20년 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그런데도 대학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이번 최종 글로벌대학 30곳에서 탈락한 대학 중 상당수는 사실상 독자 생존이 어려운 것이다. 이런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사립대 구조 개선법도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에는 학교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의 최대 30%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부실 대학 연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일정 비율의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서라도 부실 대학 구조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세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가장 늦게 움직이는 짐이 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대표는 대선 때는 종부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대선이 끝나자 ‘부자 감세’라며 입법에 반대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 추진 공약도 선거 이후 반대로 돌아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다. 대선 때는 김포공항을 “중국·일본 등과 직통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더니 두 달 뒤 인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수명을 다했다”며 없애자고 했다. 경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가 공존한다”고, 광주에선 “죽어도 애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만큼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해소를 공약한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한다고 하니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있고 ‘최악 참사’라고 한다. 민주당의 무조건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라도 학생·학부모들을 사교육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줄 방안이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과업 조장 판결’ 비판에 “사법부 독립 훼손”이란 김명수 대법원

불법 과업에 가담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문과 “기업의 입증 책임은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해명 자료를 동시에 냈다. 노조의 불법 과업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 정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일일이 입증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금방 안다. 이 판결대로 하면 앞으로 노조는 별 부담 없이 불법 과업을 벌일 수 있다. 이런 현장 상황을 모르는 데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대법관이 황당한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나서서 또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대법원 해명과 달리 실제 소송에선 노조원 개개인의 행위 정도를 입증하는 책임을 기업이 질 수밖에 없다.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배상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그동안 대법원도 불법 과업에 대해서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간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와중에 나왔다. 노란봉

투법 내용이 이 판결과 사실상 똑같다. 당연히 기업들은 ‘과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례로 이 법안을 뒷받침했다. 경총 등 경제 6단체가 “대법원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사건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은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노 대법관에 대해선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TV 토론에선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황당 판결이 나온 사건의 주심이 노 대법관이다. 그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가 했던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일도 있었다. 법 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해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가 중앙선관위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사법부 독립을 가장 훼손하고 있는 쪽은 문재인 정권 비리 재판을 질질 끌고 나중에는 재판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이다.



동영상 시청

불법 노조 판결도 당에 맞춘 김명수...이름 석 자를 박제해놓자

뉴데일리
newdaily.co.kr

사법부 아니라 '사법 운동부' | 국회는 [운동권 주력군], 사법부는 [운동권 궤]...행정부만 겨우 탈환
"내년 총선 지면 행정부마저 식물화되어 고사할 것"

사법부에 파리로 든 운동권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알았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행정부 안에도, 대법원실에도 정면으로 거역하거나 따로 노는 부서가 있다.

국회는 이에 [운동권의 주력군]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운동권의 궤] 노릇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엄중한 현실을 뼈저리게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비장한 결의와 각오를 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현 KG 모빌리티) 불법 과업에 가담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로 입증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노란 봉투법)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명수와 그의 몇몇 동료는 9월 이후에 물러나게 되어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은 지금 '일박기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게 관측자들의 지적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지금까지 익히 알려진 사법부라기보다는, [사법부에 파리로 든 운동권]이라는 게 맞을 것이다.

김명수와 그 휘하 운동권의 꼼수...일박기 판결

[사법 운동권의 지론은 무엇인가? 판결 행위를 판사의 정치적·이념적 취향에 따라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소위 '진보 법학'에 따르면, 부르주아 사회의 사법 행위는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도구로 불려왔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진보' 세상에서는 법을 '진보적' 목적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법 해석은 객관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낡은 보수의 법이론이란 주장이다.

그들 [사법 운동권]은 지난 5년여 사이, 술한 운동권적 행태를 보여왔다. [그쪽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도 끝도 없이 끌었다. △ 부정선거 의혹 사건 △ 윤미향 사건 △ 조국 사건 △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이번의 현대·쌍용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은, 그 시리즈의 한 매듭일 것이다.

[좌파 난동]에 부역한 주류 언론

이것을 바라보며 한국 자유 진영이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고 안일했으면, 자유 체제 내부에서 태어나 그 혜택이란 혜택을 모조리 누리며 자라난 반(反) 자유 세력이 이제는 사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전교한 진지(아지트)를 설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한다.

레닌은 기성 권력 밖에 다른 권력을 세워 그것으로 기성 권력을 밀어내는 방식을 취했다. 반면에 안토니오 그람시는 기성체제 안에서 기성체제의 '자유'를 심본 활용하며 다른 새 등자에 들어가 그것을 점차 빼앗아가는 바꾸기 방식을 취한다. 한국 NL 운동권은 전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NL 운동권의 진지 전략은 학생운동·노동운동을 거쳐 시민사회 각 부문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는 '혁명'에 성공했다. 특히 언론을 자기 나팔수로 만들었고, 일부 매체들은 '중립화'시켰다.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좌파 난동]에 부역했다.

국회·사법부 탈환하려면?

지난 3.9 대선을 기해 모처럼 자유 진영이 행정·입법·사법 3부 중에서 행정부만을 탈환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자들이 또 원내 다수파가 되면, 이 행정부마저 식물화할 것이다.

- 총선에서 자유 진영이 승리해야,
- △ 국회를 탈환하고
- △ 사법부를 되찾고
- △ 시민사회도 회복할 수 있다.

특히 김명수 이름 석 자를 잊지 말자!

9월 이후에 달라진 상황 속에서 그를 또 바라볼 일이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사법권정(事必歸正)이 살아있다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6월 17일 게재 되었습니다.

